

※ 본 발표자료는 원고에 기반하여, AI(NotebookLM)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 상 입법영향분석 경험에 기반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

차현숙 선임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26.4.9

# 입법영향분석의 절차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한 과학적 입법 지원

# 행정부의 첫 번째 해답: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 2021 행정기본법 제정 (제39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법제가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법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법제에 관한 법령의 입법 효과 및 법적 적합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 2022 시행령 마련 (제17조)

- ① 법제처장은 행정법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법제에 관한 법령의 입법 효과 및 법적 적합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위탁 수행

**행정부의 첫 번째 해답: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 정부 입법 과정의 촘 촘한 다중 검증 필터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분산 수행하는  
사전 검증 체계



부패유발 요인 (국민권익위)

여성 권익/성평등 (성평등가족부)

일자리 증감 및 질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인정보보호위)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지방행정/재정 영향 (행정안전부)

규제 신설·강화 심사 (규제개혁위)

# 입법영향분석을 지탱하는 3대 핵심 요소



정부는 현행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을 기 실시 중입니다.

## 입법영향분석 적용 사례 (2022)

2021 > 2022 > **2022** > 2023 > 2024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및 위치 변경 금지 권고

## 입법영향분석 적용 사례 (2023)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장애인등록제 &

판정 이의신청 절차 근거 마련 및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 개선 권고

### 위생용품 관리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권고

## 입법영향분석 적용 사례 (2024)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부동산 거래신고

이상거래 조사 시스템 개선 및 권한 명확화 권고

## 입법영향분석 적용 사례 (2025)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청소년 보호 & 폐교재산 활용

규제 완화 및 법률 적용 대상 실질화 권고

# 입법 경로의 비대칭성

## 정부 입법

- 소요 시간: 장시간 소요
- 입법 절차: 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 엄격한 다단계 통과
- 사전 영향평가: 7~8개 분야 필수 진행 (규제, 부패, 성별 등)
- 결과: 입법에 따른 문제 요소 사전 대비 및 보완 완료

## 의원 입법

- 소요 시간: 단시간 소요
- 입법 절차: 대폭 간소화
- 사전 영향평가: 부재
- 결과: 사회적 영향 및 파급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누락 가능성

# ‘우회 입법’

행정의 전문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길고 복잡한 정부 입법 과정과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한 속칭 ‘우회 입법’을 다수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 갭(Gap)을 연결하는 브릿지: 국회 차원의 입법영향분석

##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의원입법 급증

사전 검증 부재

의원입법의 급증 현상 속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검증 부재는 졸속 입법과  
사회적 혁신 저해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시작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필수적 설계 공정'**입니다.

## 제22대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청사진을 열다

윤재옥 의원안  
국회법 개정안  
(규제입법 중심의  
리권적 예측)

김소희 의원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박성준 의원안  
국회법 개정안  
(관리제인·의무부와  
법률인에 대한  
심사 전 분석 요구)

부승찬 의원안  
국회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EU 모델 기반,  
사전/사후 분석 포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공감대가 입법안 발의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제2201696호] 규제입법 방지 중심 설계 (윤재옥 의원안)



## 발의 배경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부재로  
무분별한 규제입법 양산 및 사회 혁신 저해

## 핵심 설계 요소

- 대상: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규제 신설·강화·폐지' 법률안 발의 시
- 방식: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하여 작성된 '입법영향분석서' 의무 제출
- 분석 내용: 포괄적 예상 영향, 행정/예산 소요, 규제 존속기한 설정 필요성
- 특이사항: 긴급 시 요구서로 갈음 가능, 위원회 심사 시 참고

# [제2215354호] 비용-편익 분석 중심 설계 (김소희 의원안)



## 발의 배경 :

불합리한 규제가 초래하는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

## 핵심 설계 요소

- **대상:**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률안
- **방식:** 발의 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분석요구서 제출
- **분석 내용:**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이행 절차 및 비용의 적정성,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비교
- **제출 시기:** 요구서 제출 시, 위원회 심사 전까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

# [제2202611호] 위원회 심사 전 포괄 분석 설계 (박성준 의원안)



## 발의 배경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 단계에서 예상 효과를 파악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 핵심 설계 요소

- 대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
- 요구 주체: 국회의원
- 제출 시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출
- 운영 특징: 의원은 해당 분석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 시 이를 참고하여 질적 수준 제고 (임의 제출 형태 띠)

# [제2202691/2호] 사전·사후 통합 분석 설계 (부승찬 의원안)



## 발의 배경:

법률안뿐만 아니라 정책 형성 기능 전반에 대한  
선진형 입법지원체계 필요

## 핵심 설계 요소

- 대상: 법률안 시행의 예상 영향 (제한 없는 포괄적 분석)
- 요구 주체 및 권한: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 가능
- 법적 근거 명확화: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법 제3조)에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명문 추가
- 글로벌 스탠다드: 2003년 도입된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조사처(EPRS) 모델 차용
- 제출 시기: 위원회 심사 만료 이전까지 제출 의무화

# 한눈에 보는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비교 매트릭스

[발의안]	대상 요건	분석 요구 주체	제출 및 심사 시기	핵심 성격
윤재옥 의원안	권리제한·의무부과, 규제 신설/강화/폐지	의원	발의 시 제출 (위원회 심사 시 참고)	규제입법 포괄 분석 중심
김소희 의원안	특정 목적 규제 신설 및 강화	의원	발의 시 요구, 심사 전 제출	비용-편익 경제성 방점
박성준 의원안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전반	의원	심사 전 제출 (임의 제출 형태)	위원회 심사 지원 중심
부승찬 의원안	법률안 전반 (제한 없음)	위원회 또는 의원	심사 만료 이전 제출	EU형 사전/사후 통합 포괄 분석

# 입법영향분석은 '규제'가 아닌 '입법권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 우려되는 오해

사전 분석 의무화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발의권을 제약하고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 본질적 진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파급 효과를 미리 파악하여 향후 입법 과정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연한 적용 포인트:** 규제 신설뿐만 아니라 '규제의 완화 및 폐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이 제도가 단순한 규제 완화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의 객관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 입법 분석이 만든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

성공 사례: 「여성발전기본법」(1995) → 「양성평등기본법」(2015)



1995

2015

## 1995년 제정 후 한계 도출:

제정 후 수많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이라는 넓은 프레임과 성별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한계 노출

## 2004년 이후 입법평가 누적

지속적인 입법평가 및 연구 누적. 국내외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 근거 마련

## 2015년 패러다임 전환:

10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완료

정밀한 분석은 단기적 조문을 고치는 것을 넘어 법의 근본적인 '철학'을 진화시킵니다.

# Q&A

# ?

※ 본 발표자료는 원고에 기반하여, AI(NotebookLM)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